

##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윤여준** 선진경제실 미주팀장 (yoonyj@kiep.go.kr, Tel: 044-414-1166)  
**정지현**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장 (jhjung@kiep.go.kr, Tel: 044-414-1280)  
**이규엽**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장 (kylee@kiep.go.kr, Tel: 044-414-1233)  
**강구상** 선진경제실 부연구위원 (gskang@kiep.go.kr, Tel: 044-414-1099)  
**최인아** 신남방경제실 부연구위원 (iachoi@kiep.go.kr, Tel: 044-414-1049)  
**장영욱** 선진경제실 부연구위원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김종혁** 선진경제실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Tel: 044-414-1193)  
**김은미**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emkim@kiep.go.kr, Tel: 044-414-1037)  
**김승현** 선진경제실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Tel: 044-414-1035)  
**한하린** 신남방경제실 연구원 (hlhan@kiep.go.kr, Tel: 044-414-1126)

## 차 례

1. 한미 정상회담 개요
2. 회담 주요 내용
3. 중국과 일본의 반응
4. 평가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한미 양국은 2021년 5월 21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 양국 정상은 △경제·기술 협력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협력 △대북문제 △인도-태평양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함.
  -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첨단기업과의 협력 및 미국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미국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한미 간 백신 생산 협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 접종 완료 조기 달성, 기술이전 수준 확대 등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과제로 남음.
  - 공동성명에 드러난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배려와 미국의 외교적 전략이 동시에 담긴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 가능성과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를 마련
  -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되긴 하였으나, 이는 상기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안보 협력 확대를 시사하기보다는 양국이 역내 안정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차원인 것으로 평가
-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이슈뿐만 아닌 다양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방안이 논의된 만큼 글로벌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대응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의 연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논의
- ▶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개방성·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한미 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양국간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1. 한미 정상회담 개요

■ 한미 양국은 2021년 5월 21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미(美)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미일 정상회담이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에 참석함.

■ 양국 정상은 △경제·기술 협력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협력 △대북정책 △인도·태평양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함.

- [경제·기술 협력] 안정적인 공급망 조성을 위한 협력, 우주 및 디지털 첨단 분야 협력에 합의함.

- [코로나19] 각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인 백신 개발, 제조, 공급, 접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다자간 협의체를 통하여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 대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

- [대북정책] 공통된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임을 재확인하고,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인태 전략]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Quad)'를 포함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함.

- [기후변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COP26까지 확정할 것임을 선언하였고, 양국은 청정에너지, 기후재원, 천연 탄소흡수원(산림 등), 해양 폐기물 및 플라스틱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2. 회담 주요 내용

### 가. 경제·기술 협력

■ 양국은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조성을 위한 협력, 우주 및 새로운 디지털 첨단 분야에 걸친 협력,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중심적인 디지털 및 기술 생태계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sup>1)</sup>

- 첨단·자동차용 반도체 및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상호보완적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이와 같은 핵심제품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전 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를 약속함.

○ [한국] 삼성전자는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170억 달러, 현대자동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74억 달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완성차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을 위해 14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낸드 솔루션 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R&D 센터 설립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sup>2)</sup>

1) 청와대(2021. 5. 22), "Factsheet: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Partnership," <http://english1.president.go.kr/BriefingSpeeches/Briefings/549>(검색일: 2021. 5. 24).

2)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Accelerate Economic Cooperation"(2021. 5. 24), *BusinessKorea*,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766>(검색일: 2021. 5. 24).

- [미국] 듀폰은 극자외선(EUV)용 반도체 소재 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위한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하였고, 쉘컴은 기존부터 진행해 왔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sup>3)</sup> GM과 Ford는 각각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과 합작투자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분야 협업을 강화
- 양국은 또한 인공지능, 6G, 데이터,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 신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독려하며, 특히 양자 컴퓨팅, 통신 및 센서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전문가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함.
- 특히 양국은 개방성, 투명성, 효율성을 갖춘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Open-RAN(Radio Access Network) 기술과 같은 혁신적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포함하는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Open-RAN 기술 개발 및 공개표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 \* 5G 및 6G를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전한 네트워크 연구, 개발, 테스트 및 설치 등에 미국은 25억 달러를, 한국은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
- 첨단제조 및 공급망에서 양국의 협력을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와 백악관 간 한미 공급망 태스크포스 구축을 모색하기로 함.
- 양자간 투자심사 협력 실무급 워킹그룹을 설치함으로써 투자보호 및 투자심사 메커니즘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함.
-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및 한국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
- 양국간 우주 탐사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에 따른 양국간 우주 탐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지원 및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과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강화

## 나.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백신 공급 협력

-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한국과 미국은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Global Vaccine Partnership) 구축에 합의하였고, 각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인 백신 개발, 제조, 공급, 접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 한국의 백신 제조·생산 역량과 미국의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을 결합하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기로 합의함.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간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7, 8월 중 완제품 생산 시작
  -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생산 중인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기술이전 라이선스 연장도 논의되었으나,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개발여부와 국내 허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예정
- 국내 바이오 기업 및 관련 기관과 미국의 모더나, 노바백스가 백신 연구개발, 임상, 투자, 생산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함.
  - 보건복지부,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는 코로나19 변이 대응 및 독감 결합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에 서명

3) "US, Korea to expand security alliance to health, green and hi-tech business"(2021. 5. 22), *Pulse*, <https://pulsenews.co.kr/view.php?year=2021&no=493728>(검색일: 2021. 5. 24).

- 질병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과 모더나는 mRNA 백신 관련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모더나는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 실무적 논의를 위해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발족
-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협력하여 전 세계에 백신 및 관련 물자 생산·보급을 확대하는 데 합의함.
- 상기 계약으로 인한 국내 바이오 기업의 생산물량을 글로벌 백신 조달에 활용
- 한국은 2021년도 안으로 코백스 AMC(Advance Market Commitment)<sup>4)</sup> 기여금을 상당 수준 상향하기로 약속
  - \* 현재 한국의 기여금은 1천만 달러로, 미국 40억 달러, 독일 8.2억 달러, 영국 7.4억 달러, 프랑스 1억 달러, EU 4억 달러, 일본 2억 달러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sup>5)</sup>

■ [다자간 보건협력 강화] 세계보건기구, 글로벌보건안보구상 등 다자간 협의체를 통하여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 대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sup>6)</sup>하의 협력 확대를 통해 팬데믹을 예방 및 대응하고자 함.
  - 한국은 향후 5년 동안 2억 달러를 GHSA에 신규 공여하기로 약속
- 이와 별개로, 다자 차원의 보건안보 재원조달 및 연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입장을 같이하는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함.
  - 이를 위해 한미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추진
  - 이번 회담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세계보건기구, G7, G20, 세계팬데믹조약(International Pandemic Treaty) 등의 다자기구를 통해 글로벌 보건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

■ [백신 조기 공급] 5, 6월 중 국내에 백신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미국의 잔여 물량을 대여받는 방식의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였으나 불발되었고, 대신 한국군 55만 명이 백신을 제공받는 수준에서 타협함.

- 국내 도입 물량이 적은 상반기에 미국의 백신 잔여 물량을 대여했다가 하반기에 되갚는 형식의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였음.
  - 한국의 백신 계약 물량(1억 9,200만 회분) 중 6월까지 1,832만 회분만 공급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음.
  - 지난 4월 미국은 한국의 ‘백신 스와프’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① 미국 내 백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하고 ②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백신 공급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었으며 ③ 다른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대여 형태로 백신 물량을 지원받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점쳐졌음.

4) 코백스 AMC는 중저소득 국가 92개국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 조달 기구.

5) COVAX AMC donors table(2021. 5. 20), <https://www.gavi.org/sites/default/files/covid/covax/COVAX-AMC-Donors-Table.pdf> (검색일: 2021. 5. 24).

6) 감염병 위협을 예방, 추적,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출범한 비영리 국제기구로, 현재 70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한국은 15개의 선도그룹에 속해 있음(<https://ghsagenda.org/>).

- 그러나 백신 확보 물량이 충분하고 확산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한국에 백신을 지원할 명분이 약하다는 반대에 직면했고, 이에 직접 지원 대신 미군과 접촉이 잦은 한국 군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o 한국은 백신 제조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 인구의 두 배 가까운 인원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였고, 계획에 맞게 물량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
- o 한국은 확산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공,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감염이 재확산되는 나라에 비해 접종의 시급성이 떨어짐.
- o 다만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등 한국군과 미군이 자주 접촉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 장병에게 백신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다. 대북정책

- [목표·원칙] 한미 정상은 대북정책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인 접근 방법에 방점을 찍을 것에 합의함.
- [주요 내용] 한미 정상은 대북정책에 있어 각 사안별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당초 검토가 완료된 미국의 대북정책 내용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과 달리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나타난 대북정책은 △비핵화 △대북제재 △접근방법 △남북관계 △인권 △인도적 지원 △다자협력 등 사안별로 합의된 내용을 담고 있음(표 1 참고).

표 1. 한미정상 공동성명) 대북정책 관련 주요 내용과 이슈

사안	주요 내용	이슈
비핵화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국간 의지 강조	·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용어 사용
대북제재	·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	· 현행 대북제재 유지
접근방법	·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으며, 싱가포르 공동성명 존중 ·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 · 한미의 대북접근법이 일치되도록 조율할 것을 합의	· 단계적 외교적 해법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됨. · 싱가포르 합의 존중은 이례적이며, 북미 간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한국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물
남북관계	· 2018 판문점 선언 존중 ·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기원	· 원칙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동의 · 경제부문 이외의 남북 교류협력 재개 가능성이 있음.

7) [전문] 한미정상 공동성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708&call\\_from=rsslink](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708&call_from=rsslink) (검색일: 2021. 5. 23).

사안	주요 내용	이슈
인권	·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의지 피력	· 인권문제를 정치적·경제적 차원으로 이분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 언급
인도적 지원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다자협력	· △북한 이슈 △공동 안보와 변명 △공동의 가치·규범에 기반한 질서 강화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강조 ·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의 일환으로 '쿼드' 등 다자주의 협력체제 중요성 공동 인식	· 대북정책 이행에 있어 한·미·일 동맹국과 협력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 재확인 · 북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 미국과의 다자협력체제가 중국 견제의 한 축으로 변질될 우려 존재

자료: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라.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

■ 양국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의 연계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법 집행 △사이버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 △연계성 증진 △디지털 혁신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sup>8)</sup>

- 그간 한국은 인태 전략의 군사·안보 협력은 우회하면서,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경제협력 및 비전통 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인태 전략과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해 왔음.
-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공동설명서(fact sheet)를 내고 인태 지역의 △경제적 번영(Prosperity) △인적자원개발·굿 거버넌스(People) △비전통안보 중심의 평화·안보 증진(Peace)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sup>9)</sup>

■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레드라인(red line)으로 꼽히는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되긴 하였으나, 이는 상기 문제에 대한 안보협력 확대를 시사하기보다는 양국이 규칙 기반 질서 및 역내 안정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차원일 가능성이 큼.

- 한미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준중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sup>10)</sup>

■ 또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쿼드'를 포함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힘.<sup>11)</sup>

-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중요성 인식 차원에서 입장을 같이하는 데 그침.

8) 위의 자료.

9) 외교부 정책브리핑(2020. 11. 14), 「북미국장,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협의」.

10) 「전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2021. 5. 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검색일: 2021. 5. 22).

11) 위의 자료.

- 이와 관련해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5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며, 일본 모테기 외무상도 5월 21일 니혼게이지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쿼드) 체제 자체를 넓히려는 논의는 전혀 없다”고 언급한 바 있음.<sup>12)</sup>
- 한편 우리 정부는 그간 쿼드에 대해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 우리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음.<sup>13)</sup>
-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한 새로운 의제로 △기후변화 △백신 공급을 포함한 글로벌 보건의 △5G·6G 기술 및 반도체를 포함한 신기술 △공급망 회복력 등이 언급된 만큼,<sup>14)</sup> 향후 한국과 쿼드 실무협의체 간의 기능적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잔존함.
- 한국은 애초에 △코로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협력 등 쿼드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쿼드 협력 국가들과 협력할 여지를 보여 왔음.

## 마. 기후변화 대응 협력

-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FCCC 당사국총회(COP26)까지 확정할 것임을 선언하였고, 양국은 청정에너지, 기후재원, 천연 탄소흡수원(산림 등), 해양 폐기물 및 플라스틱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우리나라는 상향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잠정안을 2021년 10월 초순경 발표한 후 11월 개최 예정인 UNFCCC 당사국총회(COP26)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이는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21년 말까지의 제출 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임.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과 기술교류를 강화하고 기존의 한미 에너지정책대화<sup>15)</sup>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것이며, 청정에너지 관련 협력범위에 수소 관련 연구·개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재생에너지(예: 해상풍력) 보급 등이 포함되도록 확대하고자 함.
- 기후재원 동원을 위해서는 개도국 지원과 투자 확대를 목표로 공공 및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해외 석탄발전소 대상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고자 OECD 및 국제 논의에서 공조를 추진할 계획임.
- 이밖에도 발전 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탈탄소화 도모, 정부 차원의 탄소 무배출 차량 개발, 천연 탄소흡수원(산림, 해양 등) 관련 협력 추진, 제7차 해양폐기물컨퍼런스의 중요성 및 2022년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차기 컨퍼런스에 대한 지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함.

12) 「日 외무상 “쿼드 확대 논의 전혀 없다”」(2021. 5. 21),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mp/2021052168881>(검색일: 2021. 5. 22).

13) 「외교부 “쿼드 공식 참여 요청 없었다…사안별 협력은 모색”」(2021. 4. 6), 『뉴스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06\\_0001396765](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06_0001396765) (검색일: 2021. 5. 16).

14) 「[전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2021. 5. 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검색일: 2021. 5. 22).

15) 2009년 당시 우리나라 지식경제부와 미국 에너지부 간 협력의향서(SOI) 체결 이후 개최되고 있는 국장급 협력채널.

### 3. 중국과 일본의 반응

#### 가. 중국의 반응

■ 5월 24일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 쿼드,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 등 한미 공동성명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기본 입장을 언급함.<sup>16)</sup>

- 그는 “한미 관계 발전이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외부의 간섭을 용납할 수 없고 신중한 언행을 촉구”함.
- 또한 “남중국해 문제는 각국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관련국들은 알고 있다”고 언급함.
- 쿼드, 인태전략 등 국제질서 이슈에 대해서는 유엔 및 유엔헌장이 국제질서의 핵심이자 규범임에도 일부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정의하거나 자신의 기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가 중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평화정책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힘.

■ 중국은 대체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미일 정상회담 결과보다 온건하다는 반응임.

- 미일 정상회담(4. 16) 이후 이례적으로 토요일(4. 17)에 중국 외교부가 입장문을 발표하여 대만, 조어도, 홍콩, 신장 문제가 언급된 미일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출하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엄정한 입장을 전했다고 밝힘.<sup>17)</sup>
- 또한 미일 동맹이 지역의 평화 안정을 해친다고 규정하고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주권·안보·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임을 강조함.
- 한편 관영매체인 환구시보<sup>18)</sup>, 신화사가 발행하는 참고소식(参考消息)<sup>19)</sup>, 국방시보<sup>20)</sup> 등 주요 언론에서도 외교부의 공식입장 발표 전에 여러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됐으나 미일 공동성명보다 낮은 수준이고 중국 이슈에 대해 비교적 자제하여 표현했다고 평가함.

#### 나. 일본의 반응

■ 일본정부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를 자제하고 있지만, 향후 대북 문제 등 역내 안보와 관련하여 한·미·일 3국간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임.<sup>21)</sup>

16) 外交部(2021. 5. 24), 「2021年5月24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17) 外交部(2021. 4. 17), 「外交部发言人就美日领导人联合声明涉华消极内容答记者问」.

18) 环球网(2021. 5. 22), 「警惕! 韩美联合声明也提台湾海峡!」.

19) 参考消息 (2021. 5. 23), 「参考快评 | 美韩总统会谈提了句台湾, 没什么大不了」.

20) 国防时报(2021. 5. 23), 「美韩会谈规格时长均超美日, 拜登做了让步, 文在寅对华立场有改变」.

- 가토 내각부 관방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대북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해 제3국 간 회담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발언함.
-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북정책을 포함, 역내 안정을 위해 3국이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미일 정상회담 당시 발언한 바 있음.

#### ■ 미일 정상회담과의 비교: 코로나19 대응

-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백신 접종 확대 △ 개인 방호물자 등 의료물자 제조 촉진 △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제조 수요에 대한 협력 △ 팬데믹 예방과 대응 등 코로나19 관련 협력방안에 합의하고 양국간 파트너십을 체결함.<sup>22)</sup>
  - 일본정부는 미일 정상회담 직전 실시된 2021년 3월 12일 쿼드 정상회담에서 미국·인도·호주 정상들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백신 제조·조달·배송 확대를 목표로 하는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음.<sup>23)</sup>
  -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화이자 사의 앨버트 블라 CEO와 전화회의에서 2021년 9월까지 일본 내 모든 접종 대상자에 대한 백신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으며, 화이자 CEO로부터 일본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음.
    - ※ 일본 외무성에서는 스가 총리가 확보한 백신 물량의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스가 총리의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로 16세 이상 접종 대상자 전원의 접종 분량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음.<sup>24)</sup>

#### ■ 미일 정상회담과의 비교: 대중국 전략

-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역내 안보, 경제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중국 기조를 전면내 내세우고 양국간 협력을 도모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표현들을 여러 차례 언급함.
  - [공동성명]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센카쿠열도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삽입
  - [경제 협력] 5G와 관련하여 중국을 염두에 두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 및 Open-RAN 등 안전하고 개방된 네트워크를 추진”한다는 협력 방침이 공동선언문에 명시됨. 또한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첨단기술 분야 관련 논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미일 양국의 기술이 “전제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sup>25)</sup>
  - [기자회견]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21세기에도 민주주의 국가가 경쟁에서 이긴다는 점을 증명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
- 한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한국과 미국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로 대중국 관련 표현의 수위가 미일 정상회담에 비해 다소 낮아짐.

21) 首相官邸(2021. 5. 24), [https://www.kantei.go.jp/jp/tyoukanpress/202105/24\\_p.html](https://www.kantei.go.jp/jp/tyoukanpress/202105/24_p.html)(검색일: 2021. 5. 24).

22) 外務省(2021. 4. 16), “U.S.-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U.S.-JAPAN GLOBAL PARTNERSHIP FOR A NEW ERA.”

23) 外務省(2021. 3. 12), “Quad Summit Fact Sheet.”

24) 「ファイザー製を追加調達、接種体制なお途上」(2021. 4. 20), 『日本経済新聞』.

25) The White House(2021. 4. 16), “Remarks by President Biden and Prime Minister Suga of Japan at Press Conference.”

## 4. 평가 및 시사점

### 가. 경제·기술 협력

-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기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불균형 이슈가 주로 제기되었던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열린 첫 번째 양국 정상회담은 공급망 재편을 위한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음.
  -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기 워싱턴에서 개최된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2017년 6월 30일)에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무역적자 증가를 주요 이슈로 제기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요구함.<sup>26)</sup>
    - 구체적으로 미국은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와 한국산 철강 덤핑 수출금지를 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졌음.
-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지닌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달성을 위한 포석을 마련함.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취약한 영역을 동맹국과 협력하여 보완하는 한편, 자국의 반도체 제조능력을 강화하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 첨단 반도체 제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계, IP, 제조장비, 소재에 특화된 미국과 협력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분야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정책 기조와 맞물려 미국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임.
  - 자칫 대만 TSMC에 의해 잠식될 수 있는 미국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는 시의 적절했다는 평가
    - TSMC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지난 4월 초에 열린 백악관 반도체 대책회의 후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힘.
  -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배터리 분야 공급망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므로 이번 발표된 대미투자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들의 미국 내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26) 「트럼프 “무역적자 더는 허용 못해”…한미 FTA 재협상 공식화(종합)」(2017. 7. 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0701005200071>(검색일: 2021. 5. 24).

## 나.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백신 공급 협력

■ [보건협력] 회담 결과 전체적으로 국내 백신 조기 공급보다는 글로벌 백신 공급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한미 간 백신 생산 협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이미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스푸트니크V, 노바백스 백신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생산하게 되면서 국내외 백신 공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음.
  - WHO가 주도하는 COVAX 프로그램은 현재 생산 부족 및 고소득국가 우선 접종으로 인해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물량만 중저소득 국가에 보급하는 중<sup>27)</sup>
  - 한국기업의 기술력을 통한 백신 위탁생산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백신 보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핵심적인 수단임.
  - 신기술인 mRNA 백신 생산을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한미 간 다자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을 선언한바, 한국이 글로벌 대응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6월에 개최되는 G7 회의(한국 초청)를 비롯,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세계보건기구, 세계무역기구, 국제팬데믹조약 등 다자기구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금이 한국의 경제력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기여금 상향 약속은 긍정적으로 평가

■ [과제] 국내 접종 완료 조기 달성, 기술이전 수준 확대 등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과제로 남음.

- '백신 스와프'가 불발되고 미국의 백신 지원 물량이 55만 명분에 그쳤기 때문에, 6월 백신 도입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 기업과 협상 노력을 지속해야 함.
  - 하반기에 몰려 있는 도입 일정을 앞당겨 접종 완료를 조기에 달성하면 국내 확산 통제 및 사망률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음.
  - 군장병 55만 명 접종을 위한 백신의 종류, 규모, 도입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
  - 현재 모더나 백신의 5, 6월 도입 일정이 구체화되는 등의 성과가 있으며, 화이자 백신 조기 공급, 노바백스 백신 승인 등을 통해 접종 물량을 확대할 수 있음.
- 기술이전 수준 및 기간 등, 이번 위탁생산 계약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 모더나와의 위탁생산 계약은 미국에서 제조된 원액을 받아 완제 충전하는 방식이며, 향후 원액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까지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번에 불발된 노바백스와의 기술이전 기간 확대를 위한 논의도 꾸준히 진행하여 중장기 팬데믹 대응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

27) 가디언(2021. 4. 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apr/22/revealed-big-shortfall-in-covax-covid-vaccine-sharing-scheme>(검색일: 2021. 5. 20).

## 다. 대북정책 및 인도·태평양 전략

■ [대북정책] 공동성명에 드러난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배려와 미국의 외교적 전략이 동시에 담긴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가능성과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함.

- [북미] 이번 공동성명은 △기존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미국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가 담겼지만, 북한에 선제적으로 유화책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실용적 접근법은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함.
  -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였던 ‘CVID’와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이 달성한 가장 높은 성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 합의의 3대 원칙을 준용함으로써 비핵화 협상 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보상(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미 관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함.
  - 반면 북한이 중시하였던 △‘북한 적대시 정책 폐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을 언급한 점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한 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언급한 점 등은 미국이 자국 원칙에 의거하여 대북 문제를 다룰 것임을 보여줌.
- [남북]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국정부의 중간자 역할과 독자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을 꼽을 수 있으며,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연계하여 비경제 부문의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 예상과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미국정부의 성과를 배제하지 않고 일부를 수용하였으며, 한국정부의 요구를 반영하였다는 점은 큰 성과로 볼 수 있음.
  - 북한의 수용여부가 관건이기는 하나 이번 성명을 낙관적으로 해석한다면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관계 진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경협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태 전략] 바이든 정부의 인태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히 살피며 우리의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이슈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쿼드 협력의제 실행 및 다른 국가들의 참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코로나 백신, 기후변화, 5G, 반도체 등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면서 글로벌 공공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개방성·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한미 협력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양국간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sup>28)</sup>

28) 최인아, 김미림(2020),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 전망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4-19호, p.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라. 기후변화 대응

■ 향후 양국간 기후변화 협력은 공통의 정책 목표인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추구하면서 △고위급 대화채널 구축 및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협력사업 발굴 △개도국의 탄소중립 달성 지원 △공정전환 관련 정책사례 공유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고위급 대화채널 구축 및 활성화] 이번 회담에서 한미 에너지정책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확대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기후변화 연관 부처(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양국의 고위급 대화와 기업·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저탄소 협력사업 발굴 공동연구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 분야(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재생에너지, 재생수소, 에너지 효율 등)나 사업(스마트시티 구축 등) 중 어느 분야·사업에서 협력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개도국의 탄소중립 달성 지원 기후재원 및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도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파리협정하에서 2025년 이후의 기후재원 조성 목표 달성에 어떻게 동참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온 지역(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의 협력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며, 참고로 2019년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공한 양자간 ODA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한: 53.9%, 미: 19.0%)와 아프리카(한: 33.0%, 미: 35.3%)가 최대 비중을 차지한 바 있음.<sup>29)</sup>
- [공정전환 관련 정책사례 공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석연료 연관산업과 근로자, 저소득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 지방정부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KISP**

29) 리우마커(Rio Marker)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이 양자간 ODA 지원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을 주목적(principal) 및 부수적(significant) 목적으로 표기한 경우를 합산하여 산출함(단, 담당자가 감축과 적응을 모두 표기할 수 있어 일부 금액이 중복 산정될 수 있음).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21. 5. 13).